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경제혁신 3개년 계획 —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2014년 12월 23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3(화) 06:00 이후 보도 가능

문의 :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윤의식 과장(044-201-3674), 윤준상 사무관(3679)
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박영삼 과장(044-203-4430), 이중엽 사무관(4456)

2016년까지 25개 노후 산단 리모델링 단지 지정

- 국토부·산업부 협업으로 '맞춤형 리모델링' 추진 -
- 전국 83개 노후산단 대상으로 기반시설, 산업혁신부문 진단 실시 -
- 내년 11개 리모델링 산단 선정하는 등 당초보다 1년 앞당겨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: 서승환)와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윤상직)는 전국 노후 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**기반시설 노후도, 혁신역량 등을 진단**하고 산단 특성에 따른 **맞춤형 리모델링**을 추진하는 내용의 「**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**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.

≪추진 경과≫

□ 정부는 작년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('13.9.25)에서 **'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'**을 마련하여 **'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** 단지로 지정하기로 하고

○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**종합적인 진단**을 거쳐 적합한 **리모델링 방안을 마련**하기 위해 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하였다.

□ 이에 따라, **국토부, 산업부, 국토연, 산업연, LH공사, 산업단지공단** 등 산업단지 관련 부처와 전문기관이 **합동 T/F**를 구성('14.4)하여, **단지별 진단**을 하고 **산업입지정책심의회**('14.12.18)를 거쳐 「**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**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.

≪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주요 내용≫

1. 노후산단 진단 결과 및 시사점

□ 진단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**전국 83개 산업단지**(국가산단 21개, 일반산단 62개)를 대상으로 도로, 주차시설 등 **기반시설 부문**(16개), 생산성과 첨단업체 비중 등 **산업혁신 부문**(11개) 관련 총 27개 지표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였다.

□ 진단 결과, 전반적으로 노후산단의 **기반시설 노후도가 심각**하고, **산업 활력도가 떨어지는 추세**로 **리모델링 착수가 시급**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.

○ 4차로 이상의 **도로율**은 **평균 5.1%**로 산단 개발기준(8~10%)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, **주차장면적**은 **평균 0.11%**로 개발기준(0.5~6%)에 크게 미달하여 **기반시설이 크게 부족**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또한, **지원시설** 용지 비율이 **평균 5.3%**로 최근 조성된 산단(5~10% 수준)에 비해 부족하고, **녹지면적**도 **평균 3.3%**로 개발기준(5~13%)보다 미흡하여 **산단 환경이 매우 열악**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할수록 **토지생산성이 낮고**, 최근 5년간 **종사자수 증가율**도 非 노후산단(42.9%)에 비해 노후 산단(25.9%)이 **현저히 낮은 수준**이다.

* 토지생산성 : 준공후 10년미만 3,680백만원/천㎡ > 20년이상 2,425백만원/천㎡

- 노후화에 따라 **첨단업체 비율이 감소**하고, 10인 미만 **영세업체 비율도 증가**하는 경향으로 오래된 산단일수록 **산업적 영세화·저 부가가치화가 심화**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 첨단산업체 비율 : 준공후 10년미만 52.5% > 20년이상 44.4%
* 10인미만 업체 비율: 준공후 10년미만 19% < 20년이상 27%

□ 다만, 노후산단 내에서도 기반시설 및 산업혁신 부문의 취약도가 산단간 큰 편차를 보여 **산단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**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○ 리모델링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부처간 업무 분담과 협업을 통해 **기반시설 재생**과 **산업 혁신부문**을 상호 보완하는 **협업 방식의 리모델링이 필요**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2. 산단 리모델링 추진 방향

□ 정부는 이러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국가 경제 파급효과, 발전 잠재성 등을 고려하여 **중점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**하여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.

○ 기반시설 및 산업 혁신 부문에서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**맞춤형 리모델링**을 추진하고, **국토부-산업부 등 부처간 협업 방식**으로 추진하며,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**민간투자를 촉진**한다는 방침이다.

○ 산단 리모델링을 위해 **기반시설 재생**, **연구·혁신 역량 제고**, **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**, **민간 투자촉진**의 4대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.

3. 세부 추진과제

1 **(기반시설 재생 활성화)** 산단 재정비 사업은 **민간 주도로 추진**될 수 있도록 **공공**은 **선도사업, 토지용도 변경, 기반시설 확충**에 주력할 계획이다.

○ 우선, **지자체, LH 등 공공기관**이 **거점지역**을 **고밀·복합 개발**하는 **선도사업**을 시행하여 전체 지구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.

- 선도 사업지역은 "**재생 활성화 지역**"으로 설정하여 용적률, 건폐율 등 **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**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.

○ 선도 사업 외 지역은 **민간 주도의 자체 정비사업**을 시행하되, 기존 공장용지 등을 지가가 높은 **복합용지(용도지역 및 용적률 특례 적용)**나 **지원시설 용지**로 **토지 용도를 변경**해 주어 **주거, 상업, 문화, 편의시설을 확충**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.

○ 산단 내 **간선도로, 주차장** 등 **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**하여 산단 기반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.

- 특히, **선도사업이나 토지용도 변경 지역에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시행**함으로써 산단 기능 개편을 촉진할 계획이다.

2 **(연구·혁신역량 제고)** 산단내 **산학융합지구**를 유치하고, **산단혁신센터** 구축 및 산학연 클러스터링을 통해 기업 **경영·R&D 등을 지원**할 예정이다.

○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유치하는 **산학융합지구를 '17년까지 총 17개 선정**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**우수 연구인력**을 공급할 계획이다.

○ 수출·R&D 지원기관 등이 집적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인 **'산단혁신센터'를 '17년까지 10개소를 구축**함으로써 기업 비즈니스 활동, 시제품 개발, 공장 스마트화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.

○ 산단내 기업과 대학, 연구소와의 **R&D 클러스터 협력**을 강화할 수 있도록 **산단별 산학연협의체**도 **지속 확대**한다.

○ 또한, 산단환경개선펀드 자금 등을 활용하여, 환경오염 유발 업종, 뿌리산업 등 **유사 업종 집적화**를 촉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생산성 및 에너지 효율 제고,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.

3 **(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)** 산단내 **정주 여건**을 개선하고, **안전 관리**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.

○ **클린사업장, 근로자 건강센터, 행복주택, 직장 어린이집** 등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, 각 부처에 분산된 산단 관련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

* '14년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시행 중인 **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** 관계부처 합동공모 대상 사업을 지속 확대

○ 산단내 화학재난 **합동방재센터**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간다.

4 **(리모델링 사업에 민간투자 활용)**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**사업방식 다변화, 제도적 인센티브 확대, 금융 및 펀드 지원** 등을 통해 산단 재생 및 혁신사업에 **민간 투자를 촉진**할 예정이다.

○ **(민간주도 산단재생 사업 활성화)** 공장주나 토지소유주들이 재생계획을 제안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"**공모형 재생사업**"을 도입하고, 민간사업이 가능하도록 **부분 재생사업** 및 **환지방식**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.

- 녹지율 기준 완화(현지개량시 녹지율 적용 배제), **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**(50→25%) 등 **인센티브를 확대**하고,

- **기업 자율의 이전을 촉진**하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전기업에게 **종전 토지에 대한 개발권 부여, 이전지역 재생사업지구 편입** 등을 추진한다.

- 또한,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설립하는 "**도시재생리츠"를 통한 산단 재생사업** 추진하는 등 금융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.

○ **(혁신 산단에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) 산단환경개선펀드 조성** 등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투자유치 성공사례를 창출한다.

- **펀드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** 산단내 유휴부지에 업종별 집적화 시설, 편의시설 구축 사업 등에 대한 민간 투자를 가속화할 예정이다.

* 정부 펀드 예산 규모도 '14년 130억원 → '15년 270억원으로 대폭 확대

- 이와 함께, 복합구역(산업·지원·공공시설) 제도, 용도구역 변경(산업시설구역 → 지원시설구역), 필지 분할 등 **제도적 인센티브**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**자발적인 구조고도화사업 투자**를 유도하게 된다.

4. 추진 체계 및 향후 일정

□ **노후거점산단 특별법***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을 **'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'으로 통합**하여 양부처 협업을 토대로 **체계적인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**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.

* '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' 국회 의결(12.9일)

○ 이에 따라 **산업부·국토부 공동으로 사업지구를 선정**하고, 단일 사업계획인 **'경쟁력강화사업계획'을 수립하여 통합 사업으로 추진**할 예정이다.

○ 이렇게 되면, **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**할 수 있을 뿐 아니라, 사업 신청·승인절차의 원스톱 통합으로 **절차간소화 효과**도 기대된다.

* 구조고도화 사업 승인 (약 3개월 소요) + 재생사업 지구 지정(약 3년 소요)
⇒ 통합계획 수립시 약 1년으로 단축 가능

□ 추진일정도 당초 '17년까지 25개 리모델링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, **'15년에 11개소**의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하는 등 **1년 앞당겨**

'16년까지 대상단지 선정을 완료하여,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.

* '14년 9개 → '15년 11개 → '16년 5개 단지 선정

○ 단지 선정을 **지자체 공모방식**으로 단지별 노후도 및 지역경제 기여도, 지자체·입주기업의 혁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이다.

≪수립 의의 및 기대 효과≫

□ 금번 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은 전국 **산업단지를 대상**으로 **노후도, 혁신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**한 **최초의 시도**로서

○ **산단별 진단**을 통해 **맞춤형 리모델링**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, **산업부, 국토부**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**공동으로 계획**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**범부처적 협업 기반을 확고히 구축**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

□ 정부는 앞으로 동 종합계획에 따라 **중점 리모델링 단지** 중심으로 **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**할 경우,

○ 노후 산업단지가 활력을 회복하고, **지역경제의 혁신 거점**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※붙임: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

OPEN 열린정책 공감과소통 지식이음정책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이중엽 사무관(☎ 044-203-4456),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윤준상 사무관(☎ 044-201-367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